

올 15대그룹 회사채 23조 만기,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 S&P 예언이 현실로?... ‘한국경제 침체’ 우려 목소리

기업들, 3년간 차입금 줄였지만  
무역분쟁 심화 등에 불확실성 ↑

한국기업평가, 車·신용카드 등  
6개산업 등급전망 ‘부정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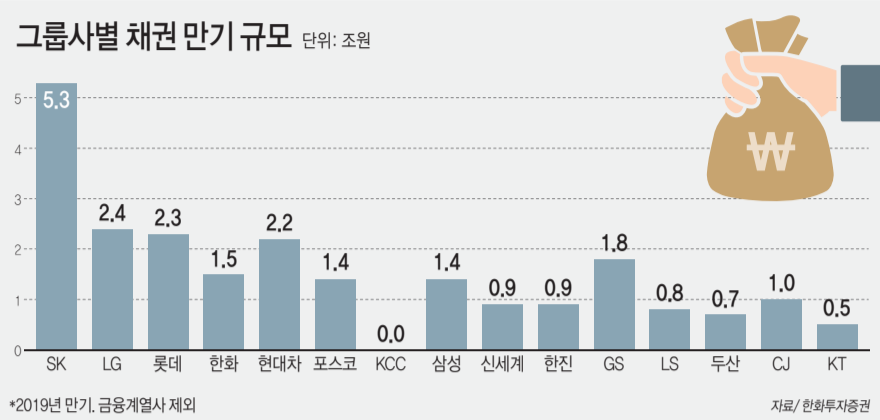
“자동차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눈에 띄는 호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험로를 마주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2016년 수준의 실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조정됐다. 코웨이 인수에 나선 ㈜웅진도 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웅진의 기업 신용등급은 ‘BBB+’다.

한신평은 “웅진그룹이 코웨이 지분 5% 내외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어서 총인수금액이 2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데다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전환사채(CB) 방식의 자금조달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서 당초 예상 대비 재무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차입금을 감축해 왔지만 최근의 무역분쟁 심화, 기업의 공격적인 재무정책, 규제위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



나고 있다. 경기침체와 실적 부진으로 국내 대기업에 심심찮게 경고장이 날아 들고 있는 것.

당장은 경고장이지만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다. 특히 기업은 수출길과 자금 조달 길이 막힐까 좌불안석이다. 신용등급에 민감한 글로벌 자금시장에선 이들을 ‘추락한 천사(fallen angel)’로 부른다. 이들의 경고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위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위기의 한국경제, 좌불안석 기업들

어떤 업종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한국기업평가는 ‘2019년 주요 산업 전망 및 신용등급 방향성 점검’을 주제로 열린 크레딧 세미나에서 자동차, 디스플레이, 소매유통, 신용카드, 대부 등 6개 산

업은 부정적으로 꼽았다.

한기평은 “자동차업체의 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되었지만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기평은 내수시장 포화 및 수출시장 불확실성으로 국내 생산 정체가 지속되는 점과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자동차산업에 ‘부정적’ 꼬리표가 붙었다. 현대모터와 웅진 등도 등급 하향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소매유통, 외식, 자동차·부품, 조선, 디스플레이패널 등의 신용등급 방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3% 초반에 머무르다 지난해에는 2.7%로 떨어졌고, 올해부터는 2% 중반 이하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

다”며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는 2016년 5위로 중국(3위)에 뒤처졌다. 여기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나노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에 역전당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한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기업들의 걱정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6%로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6%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로 각각 내다봤다.

◆ 15대그룹 회사채 만기 23조, 리스크로 부메랑(?)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국내 비금융 민간기업 23개사 중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4개사와 SK텔레콤을 ‘부정적’ 등급 전망 대상에 올려놨다.

기업들은 잇따른 경고장에 과거 건설 조선 철강 발 크레딧 악몽을 떠올린다. 상황이 나빠지면 자금 조달시장에서 ‘낙인’이 찍힐 수 있어서다. 신용등급과 채권 평가가격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

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자동적으로 하락한다. 네거티브 딱지가 붙은 경우 등급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인수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5대그룹 무보증 회사채 규모는 23조원 규모다.

SK그룹이 5조3000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 이어 LG 2조4000억원, 롯데 2조3000억원, 현대차 2조2000억원 등이 2조원대의 만기가 돌아온다. GS(1조8000억원), 한화(1조5000억원), 삼성(1조4000억원), 포스코(1조4000억원) CJ(1조원) 등도 1조원대 빚이 도래한다.

전체 기업 회사채 만기는 42조1190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이 갚아야 할 돈이 가장 많이 몰린 시기는 1, 2분기다. 각각 10조2003억원, 12조6597억원에 달한다. 이어 3분기 9조9899억원, 4분기 9조2666억원 규모다.

대기업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A씨는 “돈 구할 곳 없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올해 만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 투자와 고용이란 두 토끼를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소연 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운영 재개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7일 오후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오전 한때 운영이 중단됐다 재개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 예금자보호 못받는 저축銀 수신액 6.5조

전분기비 7.9%, 전년비 29% 늘어  
5000만원 이상 예금주 7만7551명

저축은행에 맡긴 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이상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예

금했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4737억원 규모다.

이는 전분기 말보다 7.9%(4723억원), 1년 전인 2017년 3분기보다 28.8%(1조4486억원) 각각 났다. 작년 들어서 3분기까지 증가 규모는 1조599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

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급감했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축은행 건전성이 개선되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면서 저축은행에 고액 예금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평균 2.67%로 은행(1.98%), 상호금융(2.17%), 새마을금고(2.43%)보다 높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기업 4곳중 1곳 “올 인력 구조조정 예정”

시행 이유 53% “회사 사정 어려워”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 조정 1순위

연초부터 국내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 4곳 중 1곳이 올해 인력 구조조정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사람이 기업 910개사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조정 계획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26.6%가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력 구조조정 시행 이유(복수응답)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53.3%)가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45.5%),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40.5%), ‘기업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21.9%), ‘조직에 긴장

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8.7%) 등이었다.

구조조정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실적보다 근무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질문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 (52.3%)이 압도적인 1순위에 꼽혔다.

이어 ‘개인 실적이 부진한 직원’ (18.2%), ‘고연봉을 받는 직원’ (7%), ‘실적이 부진한 부서의 직원’ (7%), ‘인사고과가 낮은 직원’ (5.7%), ‘비정규직 직원’ (3.2%) 등으로 조사됐다.

구조조정 예상 시기는 2019년 1분기 (67.4%)가 가장 많았고, ‘2분기’ (22.3%), ‘3분기’ (5.8%), ‘4분기’ (4.5%) 순이었다.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주로 ‘권고사직’ (54.1%)이 많았고, ‘정리해고’ (18.6%), ‘희망퇴직/명예퇴직’ (18.2%) 등도 있었다.

/한용수 기자 hys@

## 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

앞으로 버스기사들의 경우, 운행 전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여부 측정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업자는 버스 기사들의 음주 측정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 정부, 법률안·대통령령안 의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한 교체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